

**「2026년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
대구광역시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수요기업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구광역시가 지원하는 「2026년 대구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2026년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DIFA 2026)』 공동관 운영)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며, 지원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5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구광역시장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장, (재)대구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지원
- (지원근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중소기업법)」 제26조(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운영)
- (사업내용) 대구광역시 내 중소기업 밀집지역 상시 모니터링 및 밀집지역 공동 위기대응을 위한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
- (운영기관) (재)대구테크노파크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

2. 지원과제 · 내용

- (지원과제명) 대구 자동차부품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을 위한 2026년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DIFA 2026) 공동관 운영
- * (참고) '26년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 공식 홈페이지 www.difa.or.kr

- (지원대상) 성서4차산업단지, 성서5차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 中 자동차부품 업종 영위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내용) 대구 자동차부품 영위 중소기업 밀집지역 국내외 판로 개척 공동지원을 위한 「2026년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 공동관 운영 및 구매상담회, 수출상담회 참가 지원

< 2026년 대구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대상 전시회 개요 >

- (전시회명) 2026년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DIFA 2026)
- (개최장소) EXCO 동관 4, 5, 6홀
- (전시기간) '26.10.21(수)~10.24(토) [4일간]
- (전시회 품목) 친환경모빌리티, 미래모빌리티, 이차전지/부품/서비스
- (수행기관(주관기관)) EXCO

- (구매상담회 참가 지원) 대기업, 공공기관, 유통MD, VC 등 국내 유력 바이어, 투자자와의 1:1 상담 지원(구매상담회 : '26.10.21(수))
- (수출상담회 참가 지원) 해외시장 진출지원, 기술협력, 투자협력 등 1:1 상담 지원(수출상담회 : '26.10.22(목)~10.23(금))
- (공동관 운영) 기업 당 2개 프리미엄부스(18㎡(6mx3m) / 3.46m) 제공하며, 예산 범위 내 상담테이블 및 의자, 진열대 등 비품 제공
- (지원기간) 협약일 ~ 2026.11.30(월)
- (지원규모) 수요기업 최소 6개사 이상 선정 · 지원 예정
- (지원금액) 기업당 4,500천원 지원(부가세 제외, 부가세는 수요기업이 부담)
- (사업비 지급) 운영기관(위기지원센터)은 수행기관(전시주최기관)에 공급가액을 직접 지급하며, 수요기업은 수행기관(전시주최기관)에 부가세만 지급(세금계산서는 수요기업 명의로 발급)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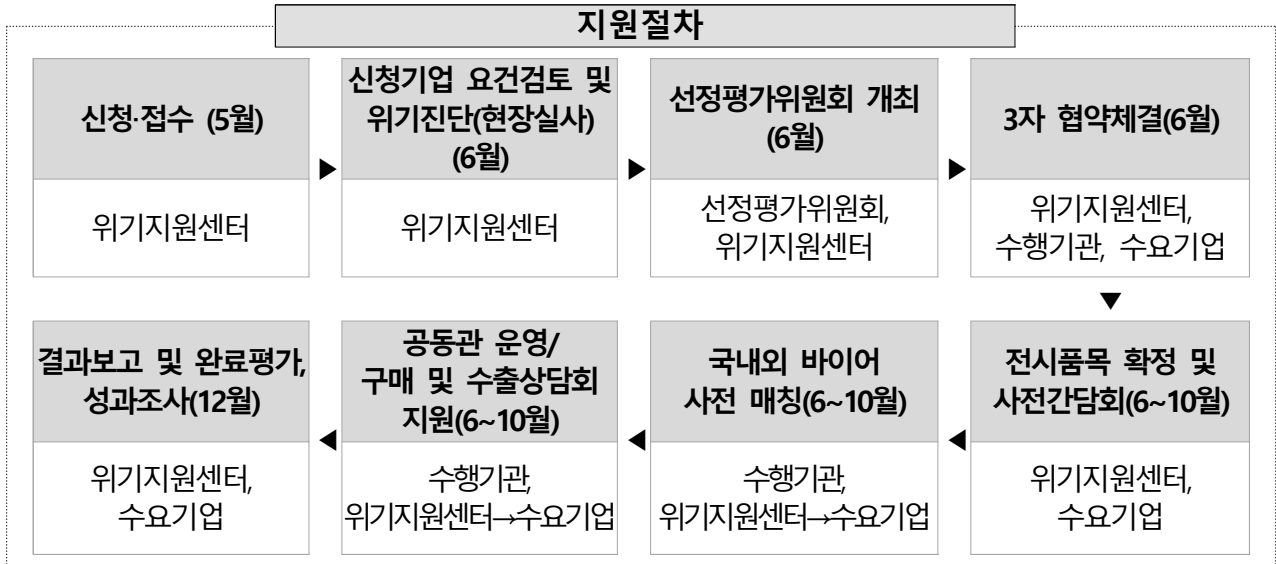
- (신청자격) 성서4차산업단지, 성서5차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 中 자동차부품 업종 영위 중소기업
 - 자동차부품 업종
 - 단위부품 : 차체, 의장, 샤프트, 전장, 파워트레인, 공조, 센서 등
 - 모듈부품 : 샤프트, 조향, 시트, 프론트엔드 모듈, 배터리팩 모듈, 인터랙션, 자율주행 부품 등
 - 신청희망 기업의 성서4차산업단지, 성서5차산업단지 소재 여부에 대해서는 운영기관(위기지원센터)에 문의

신청제외대상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 ◆ 휴·폐업 기업
- ◆ 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 ◆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 중인 업체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원절차

- (지원절차) 신청·접수 → 신청기업 요건검토 및 위기진단(현장실사) → 선정평가위원회 → 3자 협약체결 → 전시품목 확정 및 사전 간담회 → 국내외 바이어 사전매칭 → 공동관 운영, 구매 및 수출상담회 지원 → 완료평가 및 성과조사



5.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운영기관의 요건검토 및 위기진단 후,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
 - 운영기관은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추진

< 선정평가 기준 및 배점 >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배점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40
신청내용의 적절성	- 신청 목적의 명확성 - 신청 내용의 적절성 및 타당성	30
신청기업의 의지	- 신청기업의 수행의지	20
신청예산의 적정성	- 신청내용에 따른 지원예산의 적정성	10
위기 현황(가점)	- 위기요인(거래단절, 원자재 수급난, 인력난 등)에 직면한 기업 우선 지원	5점(가점)

- (지원기업 선정) 선정평가위원회는 요건검토 및 위기진단 결과를 참고하고, 신청내용을 평가항목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총 점 80점 이상인 기업을 지원기업(수요기업)으로 선정
- (선정결과 통보) 운영기관은 선정결과를 신청기업에 통보하고, 선정된 기업에 3자 협약 등 관련 사항을 안내

6.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6. 5. 11.(월) ~ 5. 29(금)
- (신청방법) 이메일(hibig51@dgtp.or.kr) 제출
- (제출서류) 아래 제출서류 각 1부

구분	제출서류	제출형태	비고
1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 신청서<서식1>	hwp, PDF 모두 제출	외부기관 발급 서류는 서류 제출일 1개월 이내 발급 준수
2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 수행계획서<서식2>		
3	신청기업 개인(기업)정보 수집·활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서식3>	PDF 제출	
4	사업자등록증명원(본사, 공장, 연구소 등 밀집지역 해당)		
5	최근 3개년(2022년~2024년)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최근 3개년(2023년~2025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6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민원24(minwon.go.kr)에서 발급 가능		

* 미비서류가 있을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추진체계

- (위기지원센터)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발굴 및 선정, 공동 위기 진단, 지원과제 총괄 기획 및 운영 관리 등
- (수행기관) 수요기업 대상 공동회복 지원과제 솔루션 이행
- (솔루션 지원기업(수요기업)) 공동회복 지원과제 솔루션 참여, 성과 제출

8. 기타사항

- (성과 및 만족도조사) 수요기업 대상 지원종료 후 성과*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며, 수요기업은 운영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내 발생한 매출, 고용, 기업지원실적 등 조사

9. 문의처

- 대구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재)대구테크노파크)
 - (전화번호) 053-757-3708, 3704, 3701
 - (이 메 일) hibig51@dgtp.or.kr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

- 제3자(불법 브로커)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당개입 주요유형	
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표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③ 허위 대출 약속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 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④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⑤ 부정청탁	정부, 공공기관 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⑥ 계약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부,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https://ols.semas.or.kr>
- (콜센터) 1533-0100
- (현장접수) 전국 12개 지역본부 및 78개 소상공인지원센터